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연구*

A Rela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변주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진미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Master : Byun, Joo-Soo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Abstract>

Traditional familism and family value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Under the family value, caring for family members is family responsibility instead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the family value played a role to impede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relation between the family value and the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family value were related to the specific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Seoul Families Survey conducted on 2006 by Seoul Women and Family Foundation. The survey data consisted of 2,500 married males and females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t-test, ANOVA, crosstabs,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while the traditional familism appeared to be held at a certain level,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divorce, and single-parent family seemed to be less traditional.

Second, the familism was found to be partly associated with the needs for the care-support family policy. The respondents who had less traditional value on marriage and child-rearing showed the higher level of needs for daycare center. This finding implied that nontraditional attitudes were related to the needs for an alternative care service such as caring through facilities rather than to the needs for supportive or complementary services.

Lastly, the respondents who had higher level of traditional familism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direct economic service (supportive service) than for other types of service in child care. And the less traditional their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rearing, the more likely they are to prefer flexible child care services and programs to other types of child care services.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family value was partly influential to family policy. However, it is worthy to note that the family value was related to family policy preference rather than to family policy needs. In other words, traditional family value appeared to influence the types of family policy rather than the level of needs for family policy.

▲주요어(Key Words) : 가족주의가치관(familism),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marriage and child-rearing), 돌봄노동지원 정책 욕구(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완적 서비스(complementary service), 대체적 서비스(alternative service).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변주수 (E-mail : bijous10@hotmail.com)

*** 교신저자 : 진미정 (E-mail : mchin@snu.ac.kr)

I. 서 론

최근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 측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으로의 진입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약화, 가족규모의 지속적인 축소, 가족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미비함은 기존 가족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을 만들었고,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가족돌봄노동'이 복지정책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제도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는 동시에, 관련 분야 연구를 활성화 시켰다. 선행연구들은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화되어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Bum-pass, 1992; Lesthaeghe, 1983; Lesthaeghe & Wilson, 1986)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태도, 의식, 가치관에 대한 연구 등이 다시 재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 사회를 지배했던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족 내 개인이 경험하는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등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육, 노인에 대한 돌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경제적·교육적·정서적 지원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의 기능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여전히 부담 지웠다(신용하·장경섭, 1996). 이는 가족기능의 과부하로 나타났으며, 개인·가족의 복지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부담과 한계는 복지에 대한 국가차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로 발전되었다(최연실, 2004).

한국보다 복지수준이 앞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향상된 교육수준과 경제체제,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됨과 동시에 출산율이 대체수준 또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만혼과 독신, 혼전동거 경향의 증가 등, 한국보다 앞선 사회 및 경제적 현대화와 더불어 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여성참여 증가, 개인화 증가는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양면적 구조를 낳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980년대 이후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모습으로 재조직화 되고 있다(Lewis, 1998; Jenson 2000). 이렇듯 서구 복지국가들은 돌봄영역에 대한 국가적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에 한국사회는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인구학적인 이슈를 통해 최근에서야 비로소 부각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정책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전통가치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며, 국가는 가족이 충족시키지

못한 잔여부분만을 보충해준다는 가족책임주의(장혜경 등, 2005)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정책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사실 각 나라의 사회제도와 정책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 형태, 경제적 발전정도,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양옥경, 200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관 역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과 의식의 바탕 위에서 발달하며, 시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사회의 여러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제도·정책들은 가치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가진 가치의식 바탕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치와 의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책적 이해를 넘어서, 이를 통한 미래 사회의 정책수립에 근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김상균·정원오, 199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는 여러 가족·사회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 복지국가 사례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으로 도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서구, 유럽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 가족이 요구하는 정책이 서구 가족이 요구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가족에게 맞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현재 한국의 정책과 가치관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가족정책을 주제로 수행된 관련 연구는 몇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정옥, 2005; 유영주, 2006; 서수경, 2002; 김성천 등, 2003)를 제시하거나 가족정책의 현황 및 평가(최연실, 2004; 이인정, 2004) 및 개혁방향 모색(김성천, 2000) 등의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보육정책(김순림, 2006; 황인철, 2006; 현진권, 2005; 김현숙, 2005)과 돌봄노동관련 지원정책(송다영, 2004; 이윤로, 2004; 김수영, 2003; 한경혜, 1998) 연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 정책(원숙연, 2005; 최성일 등, 2006; 안병철, 2004; 정영금, 2004)등 다양한 정책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의 배경에는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며, 단지 가족정책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가치관과 복지정책 관련 소수의 연구들(송다영, 2004; 양옥경·김혜영, 2001)도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가족가치 관련 의식과

가족정책 육구의 관련성을 가정한 채 분석을 진행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가족가치와 가족정책 사이의 관련여부를 정책 내용으로 재조명해 보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정책 육구와 가족주의가치 및 가족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재조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육구 및 선호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한국의 돌봄노동지원정책 현황과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육구를 가족주의가치·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사회인구학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 돌봄노동지원정책의 현황

한국보다 복지수준이 앞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인구학적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양면적 사회상황에 처한 이래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Lewis, 1998; Jenson 2000). 아동 관련 서비스의 경우 아동수당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보육지원규모가 크고 시설중심적인 특징을 보이며, 노인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도 역시 북유럽 국가들이 서비스 총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장혜경 등, 2005).

최근 국내에서도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분야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또는 '가족 돌봄기능의 사회분담'이 이슈로 부각(정경희 등, 1998; 박영란 등, 2003; 송다영 등, 2003; 김혜영, 2004; 장혜경 등, 2005; 석재은, 2006)되고 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돌봄노동지원정책은 아직 미비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아동과 노인에 대한 관련 지원정책들의 현황을 통해 돌봄노동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지원정책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요양 기간도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화된 양상을 보이는 노인돌봄은 이제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지원하는 보완 및 대체적 서비스 성격의 정책인 노인요양, 재가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이 있으며, 그 외에 경제적 지원 및 혜택 등의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인 공무원노부모 수당, 경로연금, 주택공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5).

노인복지법상으로 가족의 노인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보건 및 요양관련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임현승, 2005; 장병원, 2003; 장혜경 등, 2005). 고령사회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는 규모가 축소된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복지법상 제공되는 돌봄 관련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노인에게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노인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임현승, 2005). 그런데 노인관련 유료이용시설은 비용이 비싸고, 무료이거나 실비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는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대상이 매우 제한되므로, 이에 수급권자나 저소득이 아닌 경우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장혜경 등, 2005).

노인돌봄과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보건복지부, 2005). 노인을 입소시켜 돌봐주는 시설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양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가정봉사원(간병인)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으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이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설의 주된 활동 내용은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혜경, 2004; 임현승, 2005).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각종 서비스로써 전국 300개소(24,750명 이용)가 있고, 질환이 있는 노인을 낮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은 237개소(4,390명 이용)가 있다(보건복지부, 2005). 재가복지시설은 3가지 무료, 실비, 그리고 유료로 구분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수혜대상 이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에 한해 재가복지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 1)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노인
- 2)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주체는 각 시군구이다.

(2)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지원정책

보육 관련 돌봄노동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아동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지원제도는 지지적 서비스의 경제적·재정적 비용 지원, 보완적 서비스의 시간제/야간 보육서비스 및 휴가제도, 그리고 대체적 서비스의 보육시설서비스 등이 있다.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양육관련 경제적 비용 지원은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제도는 자녀가 1세 미만에 취직한 부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남성의 경우도 이용 가능하나 승진의 불이익에 대한 염려나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매우 저조한 육아휴직 이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은 미취학 및 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관련 경제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기준³⁾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된 대상만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용 관련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가족이나 모부자복지법상 모부자가족에게만 제공(장혜경 등, 2005)되고 또한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의 경우에 지급되는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는 돌봄에 대한 비현실적 지원금액이다(이인정, 2004).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⁴⁾이다. 그러나 소득공제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집단에 유리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집단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보육 돌봄에 대한 가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거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만 제공된다.

현재 자녀 돌봄 관련 휴가제도로서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유일하며, 육아휴직 기간동

안 급여로 월 4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이인정, 2004). 그러나 육아휴직은 자녀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휴직기간 중 동료의 과중업무에 대한 부담과 우려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원숙연,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지원 관련한 정책들의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과 관련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지원정책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누군가로부터 경제적·물질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사회 구성원들을 그 대상으로 노동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정의하고, 크게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와 '보육' 두 가지의 돌봄노동지원정책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2. 가족가치관 및 가족정책 욕구에 관련된 연구 고찰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에서 가족정책을 주제로 수행된 관련 연구는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김정옥, 2005; 김성천, 2000; 김성천 등, 2003; 서수경, 2002; 유영주, 2006; 이인정, 2004; 최연실, 2004)와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김수영, 2003; 김순림, 2006; 김현숙, 2005; 송다영, 2004; 안병철, 2004; 원숙연, 2005; 이윤로, 2004; 정영금, 2004; 최성일 등, 2006; 한경혜, 1998; 황인철, 2006; 현진권, 2005)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정책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지만, 의식과 복지정책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몇몇 연구가 있다.

우선 송다영(2004)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양의식을 중심으로 노인부양문제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부양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가족주의가치관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던 부양의식을 독립적인 척도로 구성하여, 이를 통해 부양의식의 실제, 부양부담과의 관계, 노인부양지원정책에 대한 복지욕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 부양의식을 주요 변수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양의식 실태와 부양부담, 그리고 노인부양관련 사회지원정책의 필요성이나 복지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는데, 우선 젊은 연령층, 고학력자, 취업여성일수록 노인을 가족이 책임지고 여성이 수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약하지만 부양의식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부모와의 동거의식이나 성역할에 기반한 부양의식은 약화한 반면 부모부양의식은 여전히 강한 것으

3)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가구에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만 5세 아동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¹⁾ 보육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성효용, 2006). 이를 정리하면(지원대상은 4인가구기준 318만원 이하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비용지원)

4) 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 교육비가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됨.

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부양의식은 다른 관련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부양부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부양의식이 비전통적인 사람일수록 향후 노후생활대비 방안,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사, 노인부양정책의 필요성 및 복지욕구 등에 있어 보다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 노인부양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양의식의 변화에 대한 통합적 고려와 더불어 성인지적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비전통 기혼여성 부양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점과 개괄적인 부양의식 실태와 부양부담, 노인부양 복지요구간 등의 노인 관련 의식과 정책에 대한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데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옥경·김혜경(2001)의 연구는 전통적 가족의식으로 가족주의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가족의식을 통해 다양하게 등장하는 가구형태와 가족구성의 원리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태도를 통해 가족의식의 특성을 논의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주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의식은 약화되었으나 4개의 하위차원(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친족부조 및 조상숭배)으로 구분해보면 가족주의의 핵심적 특성에 해당하는 가족중심성(가족우선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중심성이 발휘되는 영역은 핵가족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개념의 약화와 더불어 부분적으로만 가족개념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족주의 약화와 여성의 평등의식 확대는 가족의식의 근대성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족의 가부장적 원리 약화와 가족범위의 축소일 뿐이며, 나의 가족이 사회보다 우선되는 가족중심성의 약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기에 가족정책에 있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 점에서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며, 정책의 기초에 반드시 성인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남성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과 가족의식과 가족문제 및 가족정책의 관련성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지 여성들의 의식이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와 방향성에 대한 탐색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양옥경(2002)의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가족주의가치의 성향에 따라 복지제도, 복지책임주체, 복지정책욕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서, 가족주의가치와 복지의식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가족주의가치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뉘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의식과 가족주의 가치와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부적관계를 보였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의 영역에서 가족주의가치가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가치가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족주의가치가 높은 집단에서도 복지정책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복지정책 중에서는 가족주의 가치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와 효친휴가제도에 대한 요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욕구는 가족주의가치가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효친휴가제도에 대한 욕구는 가족주의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주의가치와 복지의식에 반영되고 있으며, 비록 가족주의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더 낮은 복지의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족주의가치가 높고 낮은 집단간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기에, 가족주의가치와 복지의식의 관련성은 상반적인 관계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로 보아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족주의가치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형개발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돌봄노동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주체로 정부에게 높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분석은 부재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의 탐색이 부족했으며, 살펴본 정책들은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춰 해당대상만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가족주의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병, 고령, 장애, 보육과 관련한 돌봄노동지원정책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서 가족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조작적 정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를 정의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에 대한 욕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가족주의가치, 결혼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관련 가치관에 따라 구체적인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관련 가치관에 따라, 질병·고령·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가지는 관련시설(요양전문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차이가 있는지와 어떤 유형의 정책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저출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에서 선호하는 정책 유형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요양전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질병·고령·장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지원 정책 선호 유형, 저출산 문제 해결관련 가족정책 선호유형)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와 관련이 있는가?

2. 조작적 정의

1)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가족정책은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방식에 따라서 광의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협의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변화순·최운정, 2004). 즉, 각종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에 의해 촉진·제한되는 모든 활동을 '가족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쟁점이 되고 있는 '돌봄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는 가능한 한 구체성을 띠는 욕구로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필요성, 의식, 태도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욕구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 중에서 1순위 응답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응답문항을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지지·보완·대체 형식을 중심으로 재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과정은 자료의 간결성과 집중성을 높여 핵심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필요성이 요구된다. 개별

가족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의 경영활동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보완적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족한 전문성, 인력, 기술 등을 보충해 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체적 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 마다 이용하는 지지와 보완의 서비스와는 달리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확대 및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출산보육 지원관련 항목에서는 지지·보완·대체 등의 서비스 이외에 주변 환경 지원을 통해 가족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는 '간접적 환경 지원' 서비스를 덧붙여 구성하였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은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주의가치는 옥선화(1986; 1990)의 연구에 기초한 가족주의에 대한 계량적 척도이며, 척도의 평균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 의식을 지녔다.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이혼, 동거 및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지니는 가치관 및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정의하였으며, 평균이 높을수록 관련 의식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요구 조사'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 서울특별시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의 외적 및 내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과 가족정책수요조사 그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가족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구체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이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2006년 8월 서울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기혼(이혼/사별/별거 포함)남녀 중, 95%(±1.96%) 신뢰수준 하에서 성별, 연령, 지역별 기혼자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되었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훈련된 면접원이 집단을 방문하여 개별 대면면접조사의 방법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총 2500명의 대상자가 구조화된 면접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서울특별시, 2006)5).

'질병·고령·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5) 이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울여성(재)에서 발간한 '서울특별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요 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06-정책-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최 소	최 대
가족가치관	가족주의가치	2493(100.0%)	3.72(.53)	1	5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2497(100.0%)	2.84(.75)	1	5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요양전문시설	2298(100.0%)	1.32(1.29)	0	7
	주간보호시설	2300(100.0%)	1.08(1.03)	0	7
질병·고령·장애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가족정책 욕구	재정적·경제적 지원(지지적 서비스)	1070(43.23%)	-	-	-
	다양한 서비스 지원(보완적 서비스)	790(31.92%)	-	-	-
	복지시설 지원 및 확대(대체적 서비스)	615(24.85%)	-	-	-
출산보육 문제해결관련 가족정책 욕구	재정적·경제적 지원(지지적 서비스)	325(23.52%)	-	-	-
	다양한 서비스 지원(보완적 서비스)	263(19.03%)	-	-	-
	보육시설 지원 및 확대(대체적 서비스)	419(30.32%)	-	-	-
	간접환경 지원(환경지원 서비스)	375(27.13%)	-	-	-

문는 문항에서 1순위 응답자 24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을 묻는 문항은 학령전기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45세 미만 1441명 대상자 중, 1순위 응답자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가족주의가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주의가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질병·고령·장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지원정책, 출산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일반적 기술통계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1)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를 묻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돌봄노동의 장애·노인부분으로, ‘만성 질환·치매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의 요양전문 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을 묻는 2문항과 ‘질병·고령·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정책 요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돌봄노동의 자녀보육부분으로, ‘출산보육 문제해결관련 가족 정책 요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한 문항은 원자료에서 크게 2단계로 나뉘져 있다. 첫 번째는 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분법으로 묻고 난 뒤,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두 번째 질문은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월평균 최대 얼마 정도까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내용으로, 최소 ‘30만원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31만원~50만원’, ‘51~80만원’, ‘81만원~100만원’, ‘101만원~150만원’, ‘151만원~200만원’, ‘201만원 이상 비용상관없음’까지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첫 번째 단계의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를 ‘0’으로 정하고, ‘200만원 이상 비용상관없음’의 경우를 가장 높은 요구인 ‘7’로 정하여, 이용할 의향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Guttman척도(이)법을 사용해 재구성하여 8점 리커트 척도화 시켰다.

원자료에서 ‘질병·고령·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정책 요구’, ‘출산보육 문제해결관련 가족정책 요구’는 1순위 응답한 결과 중에서 문항내용을 지지·보완·대체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해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를 분석하였다. 문항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2) 가족가치관

(1) 가족주의가치 척도

가족주의가치는 옥선화(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옥선화(1989)가 개발한 척도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영역으로 판단되는 가족우선성(개인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부모공경의식(부부관계 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형제자매 및 친척

6) Louis Guttman에 의해 고안된 척도이다. 이 척도의 기본구상은 어떤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척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홍두승, 2004).

<표 2>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 유형화 구성 내용

문항	서비스 유형화	응답 항목
질병·고령·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	경제적 지원(지지적 서비스)	① 경제적 지원 및 혜택 확대
	서비스 지원(보완적 서비스)	②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③ 가정봉사원(간병인) 서비스 확대
	복지시설 지원(대체적 서비스)	④ 지역의 복지 시설 및 요양시설 확대
		⑤ 지역의 복지 시설(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확대
		⑥ 전문요양시설· 병원 확대
	출산보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	경제적 지원(지지적 서비스)
서비스 지원(보완적 서비스)		④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출산 도우미 지원, 건강진단 등) ⑤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보육시설 지원(대체적 서비스)		② 직장 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영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보육 등)
		③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
간접환경 지원		⑥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
		⑦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기업문화
		⑧ 자녀양육과 책임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어려운 일에는 이웃이나 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이 된다)에 해당되는 3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보다는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을 더하여 총 4문항(Cronbach's $\alpha=.50$)으로 가족주의가치 척도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주의가치를 가지고 있다.

(2)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결혼, 이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고,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문항으로 동거에 대한 가치를 묻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문항과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재혼에 대한 가치를 묻는 문항은 요인분석결과 다른 문항들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 요인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총 4문항(Cronbach's $\alpha=.65$)으로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이고 비전통적 태도이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포함되었다. 연령, 학력, 가구소득은 서열변수로 범주화하였고, 결혼상태(기혼 vs 사별/이혼/별거)와 취업(취업 vs 비취업)은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가치관, 돌봄노동지원 정책 욕구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각 문항의 χ^2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가족가치관과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가족가치관에 따라 돌봄노동지원정책 선호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AS for Window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후,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기혼(이혼/사별/별거 포함) 남성 1,127명(45.1%)과 여성 1,373명(54.9%)으로서 총

<표 3> 응답자 특성

(N = 2,500)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1,127	45.1
	여 자	1,373	54.9
연 령	30대 이하	912	36.5
	40대	788	31.5
	50대	451	18.0
	60대 이상	349	14.0
학 력	중졸이하	279	11.2
	고 졸	1,166	46.9
	전문대졸	227	9.2
	대졸이상	814	32.7
결혼상태	기혼(유배우)	2,058	82.4
	사 별	166	6.6
	이 혼	273	10.9
	별 거	3	0.1
취업여부	취 업	1,741	69.6
	비취업	759	30.4
직 업	사무직 및 회사원	389	15.6
	전문직	83	3.3
	판매서비스직	272	10.9
	생산기술직 및 노무직	277	11.1
	자영업 및 경영직	691	27.7
	전업주부	603	24.2
	실직/무직	156	6.3
	기 타	24	0.9
가구소득(만원)	200만원 미만	449	18.1
	200만원~400만원 미만	1,328	53.7
	400만원~600만원 미만	570	23.1
	600만원 이상	125	5.1
맞벌이여부	맞벌이	596	23.8
	비맞벌이	1,199	48.0
	한부모/무자녀/노인가구	705	28.2

2,500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912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88명(31.5%), '50대' 451명(18.0%), 그리고 '60대 이상'은 349명(14.0%)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166명(46.9%)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가 279명(11.2%), '전문대졸' 227명(9.1%), '대졸이상' 814명(32.7%)로 대상자 전체의 88.7%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기혼자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58명(82.4%)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별·이혼·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42명(11.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1,741명(69.6%)이 취업상태였고, 그 외 759명(30.4%)이 무직이거나 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1,328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600만원 미만' 570명(23.1%), '200만원 미만' 449명(18.1%), '600만원 이상' 125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은 전체 25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자영업 및 경영직'이 691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603명(24.2%), '사무직 및 회사원' 389명(15.6%), '생산기술직 및 노무직' 277명(11.1%), '판매서비스직' 272명(10.9%), '전문직'이 83명(3.3%), 그리고 '기타' 24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여부는 '비맞벌이'형태가 1,199명(48.0%)으로 '맞벌이'형태 596명(23.8%)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부모/무자녀/노인가구'도 705명(28.2%)으로 나타났다.

2. 가족가치관에 대한 전반적 경향

<표 4>는 가족가치관(척도점수범위는 5점, 중간값이 3점)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족주의가치는 평균 3.72점(표준편차 .53),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평균 2.84점(표준편차 .75)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및 자녀양육에

<표 4>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및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경향

항 목	가족주의가치(N = 2493)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N = 2497)		
	평 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체	3.72	.53	2.84	.75	
성 별	남	3.72	.52	2.79	.72
	여	3.72	.54	2.88	.76
	t	- .07		-3.12**	
연 령	30대 이하	3.67 ^b	.52	2.98 ^a	.72
	40대	3.71 ^b	.53	2.91 ^a	.72
	50대	3.81 ^a	.52	2.74 ^b	.71
	60대 이상	3.72 ^b	.55	2.47 ^c	.76
	F	7.50***		46.60***	
학 력	중졸 이하	3.74	.51	2.45 ^c	.75
	고 졸	3.73	.53	2.83 ^b	.72
	전문대졸	3.71	.47	2.95 ^a	.71
	대졸 이상	3.69	.55	2.96 ^a	.75
	F	1.43		37.42***	
결혼상태	유배우	3.72	.54	2.81	.73
	사별/이혼/별거	3.69	.50	3.01	.80
	t	.98		-4.81***	
취 업	취 업	3.72	.52	2.89	.74
	비취업	3.71	.55	2.73	.76
	t	- .54		-4.7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9 ^b	.53	2.76	.80
	200~300만원대	3.69 ^b	.52	2.86	.71
	400~500만원대	3.77 ^{ab}	.56	2.86	.76
	600만원 이상	3.84 ^a	.47	2.82	.84
	F	5.17**		2.56 [†]	

† p<.10, **p<.01, ***p<.001

대한 태도는 비교적 중간값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주의가치는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가족주의가치(F=7.50, p<.001)를 보였고,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F=5.17, p<.01) 전통적인 가치를 보였다.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 모든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t=-3.12, p<.01) 더 개방적인 태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F=46.60, p<.001), 학력이 높을수록(F=37.42, p<.001), 배우자가 없는 경우(t=4.81, p<.001), 취업한 경우(t=4.78, p<.001), 소득수준이 200만원~500만원대의 중산층인 경우(F=2.56, p<.10)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성별, 학력, 직업여부, 소득수준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유무의 변수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대한 전반적 경향

<표 5>은 만성질환·치매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요양전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지불의향(최도점수범위는 0~7점, 중간값이 3.5점)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요양전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은 평균 1.32점(표준편차 1.29),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평균 1.08점(표준편차 1.03)으로 약 월 30 ~ 50만원 정도의 지불의향을 나타냈다. 이는 원자료 문항이 '얼마의 비용이면 이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응답한 결과로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정책의 욕구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요양전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

<표 5> 만성질환·치매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항 목	요양전문시설 이용요구 (N = 2298)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 (N = 2300)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1.32	1.29	1.08	1.03	
성 별	남	1.31	1.36	1.10	1.08
	여	1.33	1.24	1.06	.99
	<i>t</i>	-33		.91	
연 령	30대 이하	1.40 ^a	1.25	1.12 ^a	.99
	40대	1.35 ^a	1.30	1.14 ^a	1.02
	50대	1.38 ^a	1.37	1.04 ^a	.99
	60대 이상	.93 ^b	1.23	.88 ^b	1.17
	<i>F</i>	11.48***		5.72***	
학 력	중졸 이하	.93 ^c	1.16	.86 ^c	1.13
	고 졸	1.22 ^b	1.22	1.01 ^{bc}	.95
	전문대졸	1.26 ^b	1.25	1.04 ^b	.88
	대졸 이상	1.62 ^a	1.40	1.29 ^a	1.12
	<i>F</i>	24.16***		16.17***	
결혼상태	유배우	1.37	1.32	1.12	1.05
	사별/이혼/별거	1.08	1.15	.88	.90
	<i>t</i>	4.49***		4.63***	
취 업	취 업	1.34	1.31	1.11	1.03
	비취업	1.27	1.26	1.01	1.03
	<i>t</i>	-1.24		-2.1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2 ^c	.94	.81 ^c	.83
	200~300만원대	1.34 ^b	1.23	1.07 ^b	.96
	400~500만원대	1.44 ^b	1.40	1.20 ^b	1.13
	600만원 이상	1.94 ^a	1.97	1.62 ^a	1.55
	<i>F</i>	25.39***		23.55***	

* $p<.05$, *** $p<.001$ DMR: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하의 연령이 ($F=11.48, p<.001$), 학력이 높을수록($F=24.16,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t=4.49, p<.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t=25.39, p<.001$) 요양전문시설 이용 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간보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0대 이하의 연령이($F=5.72, p<.001$), 학력이 높을수록($F=16.17,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t=4.63, p<.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F=23.55, p<.001$) 높은 요구를 보였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질문은 취업상태($t=-2.13, p<.05$)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한 대상자가 비취업 대상자에 비해 더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은 질병, 고령, 장애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한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었는데, 이는 앞서 나타난 최대지불의향에 나타난 낮은 요구 경향에 대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정책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결과, 연령($\chi^2=13.91, p<.001$)과 결혼상태($\chi^2=14.47, p<.001$)에 따라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정책 욕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보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정책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출산보육에 대한 정책 선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고른 욕구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재정적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으로는 현재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인 정책의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정책 요구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에서는 가구소득($\chi^2=17.47, p<.05$)에 따라 출산보육 문제해결 관련 가족의 정책 욕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돌봄노동 지원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표 6> 질병·고령·장애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경향(N = 2475)

항 목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지원	빈도(%)	χ^2
성 별	남	451(40.45)	348(31.21)	316(28.34)	1115(100.0)	13.91***
	여	619(45.51)	442(32.50)	299(21.99)	1360(100.0)	
연 령	30대 이하	404(44.79)	279(30.93)	219(24.28)	902(100.0)	5.72
	40대	347(44.32)	244(31.16)	192(24.52)	783(100.0)	
	50대	172(38.57)	152(34.08)	122(27.35)	446(100.0)	
	60대 이상	147(42.73)	115(33.43)	82(23.84)	344(100.0)	
학 력	중 졸	126(45.65)	89(32.25)	61(22.10)	276(100.0)	2.89
	고 졸	486(42.26)	372(32.35)	292(25.39)	1150(100.0)	
	전문대졸	105(46.46)	68(30.09)	53(23.45)	226(100.0)	
	대졸 이상	344(42.52)	258(31.89)	207(25.59)	809(100.0)	
결혼상태	유배우	857(42.03)	645(31.63)	537(26.34)	2039(100.0)	14.47***
	사별/이혼/별거	213(48.85)	145(33.26)	78(17.89)	436(100.0)	
취 업	취 업	330(43.82)	242(32.14)	181(24.04)	753(30.42)	.39
	비취업	740(42.97)	548(31.82)	434(25.20)	1722(69.5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5(47.78)	143(31.78)	92(20.44)	450(100.0)	9.45
	200~300만원대	575(43.27)	409(30.78)	345(25.96)	1329(100.0)	
	400~500만원대	232(40.92)	189(33.33)	146(25.75)	567(100.0)	
	600만원 이상	48(39.02)	45(36.59)	30(24.39)	123(100.0)	

***p<.001

<표 7> 출산보육 문제해결 관련 가족정책 욕구 경향

(N = 1382)

항 목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지원	간접환경 지원	빈도(%)	χ^2
성 별	남	137(23.22)	122(20.68)	172(29.15)	159(26.95)	590(100.0)	1.98
	여	188(23.74)	141(17.80)	247(31.19)	216(27.27)	792(100.0)	
연 령	30대 이하	227(25.11)	168(18.58)	279(30.86)	230(25.44)	904(100.0)	6.11
	40대 이상	98(20.50)	95(19.87)	140(29.29)	145(30.33)	478(100.0)	
학 력	고 졸	137(23.91)	120(20.94)	157(27.40)	159(27.75)	573(100.0)	8.54
	전문대졸	44(25.14)	23(13.14)	62(35.43)	46(26.29)	175(100.0)	
	대졸 이상	141(22.42)	120(19.08)	200(31.80)	168(26.71)	629(100.0)	
결혼상태	유배우	262(22.92)	217(18.99)	344(30.10)	320(28.00)	1143(100.0)	2.91
	사별/이혼/별거	63(26.36)	46(19.25)	75(31.38)	55(23.01)	239(100.0)	
취 업	취 업	87(24.30)	65(18.16)	102(28.49)	104(29.05)	358(100.0)	1.50
	비취업	238(23.24)	198(19.34)	317(30.96)	271(26.46)	1024(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2(27.66)	30(15.96)	50(26.60)	56(29.79)	188(100.0)	17.47*
	200~300만원대	215(24.10)	183(20.52)	267(29.93)	227(25.45)	892(100.0)	
	400만원 이상	58(19.33)	50(16.67)	102(34.00)	90(30.00)	300(100.0)	

*p<.05

경제적·비용적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한 응답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질병, 고령, 장애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정책 욕구 분석에서 '경제적 지원'에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출산보육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다방면의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는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의 지원 및 책임에 대한 요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에 대한 관계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가족주의가치와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가족가치관에 따른 만성질환·치매 가족구성원의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요양전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N = 2298)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N = 2300)	
	B	β*	B	β
상 수	1.66		1.13	
가족주의가치	-.06	-.02	-.04	-.02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03	.02	.09***	.06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 별				
여자(남자 = 0)	.11 [†]	.04	.03	.01
연 령				
30대 이하	.03	.01	-.02	-.01
50대	.05	.01	-.11 ^{††}	-.04
60대 이상	-.11	-.03	-.04	-.01
학 령				
중 졸	-.39***	-.09	-.17 ^{†††}	-.05
고 졸	-.34***	-.13	-.20***	-.09
전문대졸	-.30***	-.06	-.18*	-.05
결혼상태				
사별/이혼/별거(유배우=0)	-.08	-.02	-.12*	-.04
취 업				
취업(비취업=0)	.03	.01	.07	.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	-.07	-.16*	-.06
400~500만원대	.06	.02	.11*	.04
600만원 이상	.59**	.09	.55***	.11
F	9.04***		8.28***	
R ²	.05		.04	

주: 준거집단으로는 남자, 40대, 대졸, 유배우, 비취업, 가구소득 200~300만원대**가 선택되었음.

[†] p < .10, ^{*}p<.05, ^{**}p<.01, ^{***}p<.001

* 표준화된 계수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월 369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선택함.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의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다중회귀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만성질환자·치매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관련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는 <표 8>, 그리고 다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한 질병, 노인, 장애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지원정책 분석 결과는 <표 9>, 마지막으로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있는 출산보육 문제에 대한 정책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1)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 요양전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만성질환·치매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의 요양전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양전문시설 이용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경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보다 더 높아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은 요양전문시설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 학력이 낮을수록 요양전문시설 이용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300만원대 집단에 비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요양전문시설 이용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0만원 이상 가구소득을 가진 집단의 경우 요양전문시설 이용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유로운 생활이 노후까지 이어지면서, 고급화된 요양전문시설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보여주는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요양전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유의한 관련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학력, 결혼상태,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가 높은 것으로 즉, 개방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표 9>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족가치관과 질병·고령·장애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N = 2475)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지원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상 수	-.56(.38)		- .55(.41)	
가족주의가치	.05(.09)	1.06	-.01(.09)	.98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02(.06)	1.02	-.02(.07)	.97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 별				
여(남 = 0)	-.03(.05)	.93	-.17(.06)**	.70
연 령				
30대 이하	-.13(.09)	1.05	-.11(.09)	.99
50대	.06(.10)	1.23	.09(.10)	1.21
60대 이상	.21(.14)	1.21	.12(.15)	1.43
학 령				
중 졸	-.15(.15)	.78	-.13(.17)	.80
고 졸	.08(.08)	.99	.10(.08)	1.02
전문대졸	-.02(.13)	.89	-.04(.14)	.88
결혼상태				
사별/이혼/별거 (유배우=0)	-.01(.07)	.98	-.18(.08)*	.68
취 업				
취업(비취업=0)	-.01(.06)	.97	-.05(.07)	.8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3(.12)	.92	-.11(.13)	.83
400~500만원대	.04(.09)	1.10	.03(.10)	.97
600만원 이상	.13(.16)	1.20	.01(.18)	.93
-2 LL		5216.30		
LR Chi-square(df=28)		37.81 [†]		

주: 준거집단으로는 남자, 40대, 대졸, 유배우, 비취업, 가구소득 200~300만원대, '경제적 지원'이 선택되었음.

[†]p<.10, *p<.05, **p<.01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은 40대에 비해 50대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용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에서는 사별이나 이혼, 별거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가구소득이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간보호시설 이용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Fisher & Lieberman, 1999), 이 연구에서는 요양전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두 결과 모두 학력과 가구소득의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로 인해 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 질병·고령·장애 돌봄가족
 질병, 고령, 장애로 인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서비스 지원 정책 선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결과

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지시설에 대한 정책 선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 대해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욕구보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사별이나 이혼, 별거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3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3)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 출산보육 문제

출산보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분석에서는 학력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이상에 비해 전문대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경제적 지원 보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승산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가치관과는 유의미한 관련성 발견되지 않았다.

보육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출산보육 문제 해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결과에서는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구소득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보육복지시

<표 10>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족가치관과 출산보육 문제해결 관련 가족정책 욕구

	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지원		간접환경 지원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상 수	.12(.67)		1.15(.60)		-.26(.62)	
가족주의가치	-.14(.16)	.86	.39(.14)**	.67	.00(.14)	1.00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01(.11)	1.01	.17(.10) [†]	1.19	-.12(.10)	1.13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 별						
여(남 = 0)	-.06(.10)	.87	.08(.09)	1.18	.00(.09)	1.00
연 령						
30대 이하	-.12(.09)	.77	-.07(.08)	.86	-.18(.08)*	.69
학 령						
고졸이하	.20(.12)	1.08	-.12(.11)	.85	.02(.11)	.99
전문대졸	-.33(.18) [†]	.62	.09(.14)	1.06	-.05(.15)	.91
결혼상태						
사별/이혼/별거 (유배우=0)	.00(.13)	1.00	-.01(.11)	.97	-.20(.12) [†]	.65
취 업						
취업(비취업=0)	.01(.12)	1.03	.09(.10)	1.21	-.01(.10)	.9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19)	.67	-.30(.17) [†]	.73	.04(.16)	1.23
400만원 이상	.12(.17)	.98	.31(.14)*	1.36	.13(.15)	1.35
-2 LL			3724.94			
LR Chi-square(df=30)			46.28*			

주: 준거집단으로는 남자, 40대, 대졸, 유배우, 비취업, 가구소득 200~300만원대,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지원'문항이 선택되었음.

[†]p<.10, *p<.05, **p<.01

설에 대한 정책 선호 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경제적인 지원보다 복지시설 지원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300만원대 비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은 보육복지시설에 대한 정책 선호 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은 경제적 지원 보다 보육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환경 지원 정책이 출산보육 정책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응답 결과에서는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 비해 30대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 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사별이나 이혼, 별거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간접적 환경 지원 정책 보다 현금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서울지역 기혼자를 대상으로 돌봄노동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유형 및 최대지불의향을 통해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 이를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사회는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온 가족가치관이 가족구

성원의 돌봄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켜, 한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을 축소시키고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이 사회변동과 더불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가족가치관과 관련 사회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안이 시급한 가족문제의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정책논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드물게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살펴본 관련 몇몇 연구들을 통해 의식과 가치관에 따른 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 볼 수도 있었으나, 독립적인 연구로써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본 실증적인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과연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 분석에 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노동지원정책에 대한 욕구를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살펴 보는 것이다. 총 2500명 대상을 설문조사한 '서울특별시 가족 실태 및 가족정책 요구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먼저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주의가치' 척도 중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3가지 영역과 '결혼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해 지니는 가치나 태도의 내용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는 장애·노인 부분의 정책 욕구·시설 이용시 최대지불의향과 출산보육 부분의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로부터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가족주의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중간값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주의가치는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 모든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 부분에서는 세대차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를 보였다. 또한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성별, 학력, 직업여부, 소득수준 변수 이외에 배우자유무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취업한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개방적인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가족가치관은 동거, 이혼, 한부모 가족에 대해 보다 허용적으로 되는 동시에 부계가족 중심성, 가족우선성 등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세대의 가족·문화적 경험차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상이한 변화에 대해 신중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가치관은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가치에 따른 요양전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과 주간보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에서는 어떠한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으며,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요양전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에서 역시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주간보호시설 이용 최대지불의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개방적인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대한 더 큰 요구를 하며,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 욕구에 대한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가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진 경우 시설을 통한 보호, 즉 '대체적 서비스' 지원 정책에 보다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돌봄노동지원정책 선호유형에 대해서는 가족주의가치에 따라 출산보육 문제해결과 관련 정책 선호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대체적 서비스' 지원 정책 보다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지원을

통한 재정적·경제적 서비스의 '지지적 서비스' 지원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획일화된 경제적 '지지적 서비스' 지원 정책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융통성 있는 '대체적 서비스' 지원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가족가치관이 가족정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점을 제공한다.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전통적일수록 '지지적 서비스'의 경제적 지원 관련 돌봄노동 정책을 선호하며, 이 모든 것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밖의 정책 선호유형과 욕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전체 돌봄노동지원정책 선호유형을 해석하기에는 설명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가치관과 시설이용 지불의향 및 가족정책 욕구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지 않으나, 가치관이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즉, 가족가치관과 선호하는 정책의 유형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며, 다시 말해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경제적 지원 욕구가 더 높았다는 점은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결혼 및 자녀양육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정책 선호유형 분석결과에서는 통제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돌봄노동지원정책 개발 과정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정책' 관련 조사자료를 이차적으로 활용한 까닭에 돌봄노동지원정책의 욕구 측정을 보다 정교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대한 변수를 보강하여 그 밖의 또 다른 관련 가족정책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에 대한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연구였고,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 가족정책의 욕구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2007).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36(10). 145-159.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규원(199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 4.
-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5, 71-102.
- 김성천·안현미(2003). 참여정부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의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2, 35-63.
- 김수영(2003).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족부양자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사회복지정책**, 17, 77-105.
- 김순립(2006). 정책논단 :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방향, **노동리뷰**, 2, 83-87.
- 김순옥, 류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73-101.
- 김일명(1988).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옥(200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4, 75-87.
- 김현숙(2005).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재정포럼**, 113, 6-23.
- 김현옥(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가족과 문화**, 14(1), 3-30.
- 김혜경(2004). 요보호 노인 부양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보전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123-147.
- 김혜영(1996).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4). 가족여가와 젠더, **가족과 문화**, 16(2), 129-170.
- 박민자(1994).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경문사
- 박영란(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교문사.
- 변회순(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고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0, 85-134.
- 변회순·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서수경(2002). 근대 모성담론을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37-157.
- 서수경(2002).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9-37.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총서(2005). **생활과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2006). **서울특별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재)서울여성.
- 석재은(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73-302.
- 성효영(2006).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기본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0, 27-49.
-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송다영·김미경(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 갈등, **한국여성학회**, 19(2), 145-176.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 안병철(2004).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에 대한 일 고찰: 등장배경, 도입목적, 현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71-83.
- 양옥경(2000).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양옥경·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여성가족부(2006). 2006. 12월말 보육통계
- 옥선화(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교문사.
- 옥선화(1986). 가족주의 가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주의 척도 제작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3), 143-153.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 옥선화 등(2001). 재미동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 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29.
- 원숙연(2005).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9.
- 유영주(2006).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 문제와 전망, **여성가족생활연구**, 10, 51-75.
- 은기수(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이동원(1987). 가족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 논총, 52, 228-254.
-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3, 87-105.
- 이윤로(2004).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노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53-70.
- 이인정(2004). 한국 가족복지의 현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0, 125-142.
- 임현승(2005). 노인요양시설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역복지정책**, 19(12), 126~138.
- 장병원(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 방향, **대한건축학회 건축**, 47(6), 10-15.
- 장혜경 · 홍승아 · 김영란 · 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경희 등(1998).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금(2004).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91-100.
- 조홍식 · 김인숙 · 김혜란 · 김혜련 · 신은주(2005).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성일 · 유계숙(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 최연실(2004).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사회과학연구**, 19, 1-24.
-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통계청(2006). 2005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 이혼편). 통계청
-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 46-58.
- 한남제(1994). 한국 가족의 변천, **가정의학회지**, 15(11), 697-704.
- 현진권(2005). 보육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19(2), 177-202.
- 황인철(2006). 정책논단 : 수요자 중심의 공보육 제공을 통한 보육정책이 되어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 88-93.
- Baxter, J.(1994). "Is Husband's Class Enoug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220-235.
- Benner., Patricia(1989). The primacy of car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 Menlo part.
- Bumpass, Larry L.(1992).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s", *Demography*, Vol.27, No.4, pp.483-498.
- Collins Cobuild Dictionary(2002).
- Crohan, S. E. and J. Veroff. 1989. "Dimensions of Marital Well-being Among White and Black Newlywe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373-383.
- Crompton, R.(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Polity Press.
- Daly, M and J. Lewis(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Evers, A.(1993). "The Welfare Mix Approach: Understanding the Pluralism of Welfare Systems." A. Evers & I. Svetlik(eds). *Balancing Pluralism: New Welfare Mixes in Care for the Elderly*. European Centre Vienna:Avebury.
- Fisher, I & Lieberman, M. A.(1999). A Longitudinal Study of Predictors of Nursing Home Placeme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The Contribution of Family Characteristics. *The Gerontologist*, Vol.39, No.6, 677-686.
- Heller P. L.(1976).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73-80.
- Heller, Peter, L.(1970).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73-80.
- Jenson, J. and Jacobzone, S.(2000). "Care Allowances for the Frail Elderly and their Impact on Women Care-Giver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41.
- Kamerman, S., & Kahn, A.(eds).(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14 Countri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ininger, M.(1981a). The phenomenon of caring :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3-15).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Lesthaeghe, Ron and Chris Wilson.(1986). "Modes of Production, Secularization, and the Pace of Fertility Decline in Western Europe, 1870-1930", pp.261-292 in A.J. Coale and S.C.Watkins (eds.), *The Decline in Fertility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sthaeghe, Ron.(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an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 pp.411-435.
- Lewis, J.(1998).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 Orem, D. E.(1985). *Nursing : Concepts of Practice*(3rd ed.), N.Y.: McGraw-Hill Inc.

- Pijl, M.(1994). "When Private Care Goes Public." in A. Evers, M. Pijl & C. Ungerson(eds.) Payments for Care: A Comparative Overview. European Centre Vienna: Avebury. 3-18.
- Smith, T. E. and P. B. Graham.(1995).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930-940.
- Vannoy, D. and W. W. Philliber.(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87-398.
- Zimmerman, S. L.(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ies. CA: Sage Publications.

- 접수 일 : 2008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8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8월 12일